

	<h1>보 도 자 료</h1>	작성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p>관계부처 합동</p>	<p>2020년 1월 8일(수) 조간 (1. 7. 14:3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담당자	과 장 김 재 흠 사무관 권 순 관 세부소관 <참고 1>
		연락처	044-205-4210 044-205-4219 010-7142-1129

안전한 통학로 만들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 정부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

- ▶ 어린이 보호 최우선 - 운전자 안전운전 가능한 도로환경 마련에 중점
- ▶ 2022년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등·하굣길 교통안전계도 확대
- ▶ 운전자·보행자 시야 가리는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하고 공영주차장 공급
- ▶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 확대

□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금년도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 통과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된 것이 계기가 되어

-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 지문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초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 분야별 주요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 그리고,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더 강화하여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 ※ 경찰청,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추진('20년~)
- 아울러,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②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 (개정) 보호구역 12만원

- 그리고,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금년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 (현행) ①소화전, ②교차로, ③버스정류장, ④횡단보도 → (개선) ⑤보호구역 추가

※ (예시) 보도가 없는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후, 보도·보행로 설치



- 아울러, 노상주차장 폐지 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3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

-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 6,000여개 학교당 6명 / '19년 19천명 → '20년 23천명 → '22년 36천명

-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개선*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지키기 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어린이 음성으로 안내, 가중처벌 안내, 보호구역 도로색상 전환 등 검토

4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 올해 상반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 보호구역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단위 유관 기관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교통안전협의체 구성개요>



5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현행) 5개 법률에 규정된 6종 시설 → (변경) 11개 법률에 규정된 18종 시설 /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아울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일시정지 및 안전확인 후 서행 의무,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참고 1**과제별 소관 부처 및 담당**

부 처	부 서	담당자	연락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과 장 오성배	044-203-6353
		사무관 김운후	044-203-6407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과 장 권도연	044-203-3151
		사무관 이창호	044-203-3156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과 장 박기준	044-202-3470
		사무관 박소영	044-202-3477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과 장 윤영중	044-201-3862
		사무관 최용관	044-201-3868
경찰청	교통안전과	과 장 박종천	02-3150-2052
		경 감 우신호	02-3150-0632
	교통운영과	과 장 한창훈	02-3150-2053
		경 위 이종민	02-3150-0612

목표

- (1단계)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자수 : ('17년) 8명 → ('18년) 3명 → ('22년) 0명
- (2단계) 2024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Global Top 7' 수준으로 감축
 - ▶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 ('16년) 1.1명(OECD 21위) → ('24년) 0.6명(OECD 7위)

추진 전략

-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초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
 - ※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의 핵심은 운전자 처벌이 아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교육·홍보 및 규제·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 실수가 있더라도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로환경 및 시설 개선

주요 과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 통학로 설치 등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안전 확보 ■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선 및 확산, 보호구역 지정개선 ■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외 구역 안전관리 강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보행자 보호 및 법규 위반자 단속·처벌강화 ■ 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및 주민신고제 도입 ■ 주차수요를 고려, 주차환경 개선지원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활성화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 확대 및 대국민 인식 제고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정책 추진 ■ 시설개선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전국 단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연구개발(R&D) 활성화 ■ 보호구역 안전진단 확대 및 신호 운영체계 개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 확대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 통학버스 관계자 안전인식 제고, 안전의무 위반 단속 및 처벌강화 ■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drop zone) 도입 검토

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및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 * '20년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 우선 설치 → '22년까지 설치완료
 - ** 전국 16,789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제한속도 40km/h 이상은 588개(3.5%)
- 통학로 등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공간 지속 확보
 - ※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학교부지를 적극 활용 / 물리적 공간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강화 적용하되,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 부여(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차량속도 저감시설 규격 보완 등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선*
 - * 과속방지턱 등 기존 안전시설 규격 보완, 노란신호등·노란발자국 등 시인성 강화를 위한 시설 신규 반영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확대*, 도로외 구역 안전관리 강화**
 - * 어린이공원·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왕래가 잦은 시설,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 등
 - ** 도로외 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신설, 위반시 벌칙 부과(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②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 보호구역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정지 의무 부과
- 보호구역내 주·정차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 *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 (개정) 보호구역 12만원(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281개소) 폐지* 및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보호구역 추가** 검토
 - *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공급 확대 병행('20년 국토부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 2,872억원)
 - ** (현행) ①소화전, ②교차로, ③버스정류장, ④횡단보도 →(개선) ⑤보호구역 추가

③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 확대*
 - * '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6,000여개, 학교당 6명)로 확대 / '18년 13천명 → '19년 19천명 → '20년 23천명 → '22년 36천명
-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확대* 및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 * AR·VR 등 실감형 자료 개발, 안전체험관에 보호구역 안전한 보행코너 신설
 - **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내용 추가 등
- 내비게이션 안내(어린이 음성), 화면 표출(제한속도 초과시 경고) 등 보호구역 인지도 제고

④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등 지자체·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정책 추진
 - * 지역 단위 교통안전 유관기관간 협업강화(전국 243개 지자체 중 224개 구성·운영)
- 시설개선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어린이 교통안전 연구개발 확대**
 - *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20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및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병행
 - **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스마트 보행안전 환경 구축(예 :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구축 R&D 등)

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관리 사각지대 해소
 - * (현행) 5개 법률에 규정된 6종 시설 → (변경) 11개 법률에 규정된 18종 시설 /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반기별 전국 일제 점검 및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 일시정지 및 안전확인 후 서행 의무, 앞지르기 금지 의무(위반시 20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참고 4

대책 시행 후 주요 변경사항

	주요 지표	현재	앞으로(2022년)
시설 확충	무인교통단속장비	5% (820대)	100% (설치 부적합 지역 제외) ※ 2020년 1,500대 설치
	교통신호기	61% (17,590개소)	100% (설치 부적합 지역 제외) ※ 2020년 2,200개소 설치
	통학로 (보도 미설치 1,834개소)	보도 등 설치 892개소	100개소 추가 (학교부지 활용, 연 30~35개소)
		보행자 우선 통행권 없음	100개소 추가 (보행 친화적 포장, 연 30~35개소) ※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 4,354면 ※ '19년말 기준 59개소 폐지	제로화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CCTV	911대	3,234대 (+2,323대)
제도, 운영 개선	제한속도 40km/h 이상 보호구역	588개소	모든 도로 30km/h로 단계적 하향 조정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일반도로의 2배 (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16,789개소	18,155개소 (+1,366개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4종 (소화전, 교차로, 정류장, 횡단보도)	5종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노인 일자리 인력 (보호구역 교통지원 봉사)	19,000명	36,000명 (+17,000명)
	통학버스 신고대상	5개 법률 6종 시설	11개 법률 18종 시설 (+12종 시설)

참고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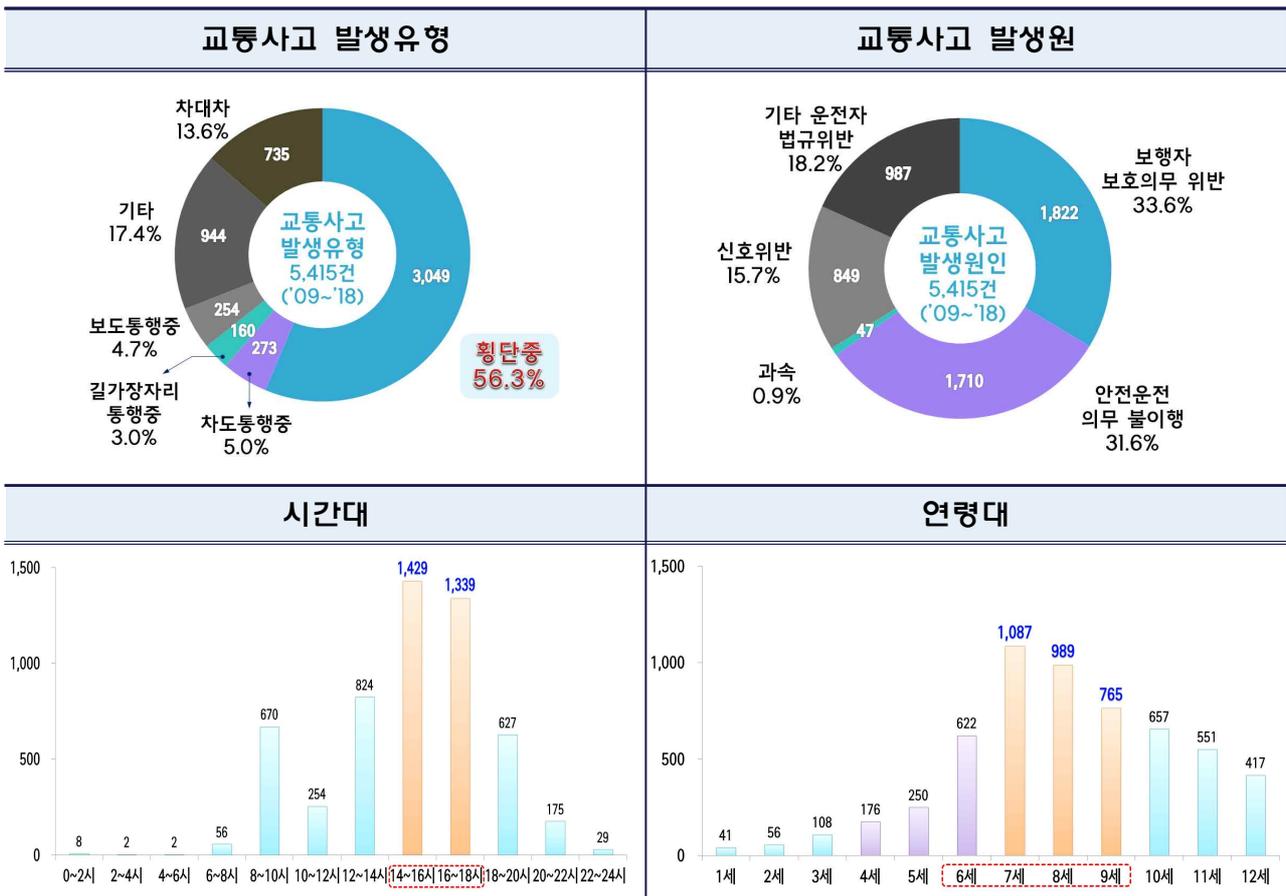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2003~2018년)

(단위 : 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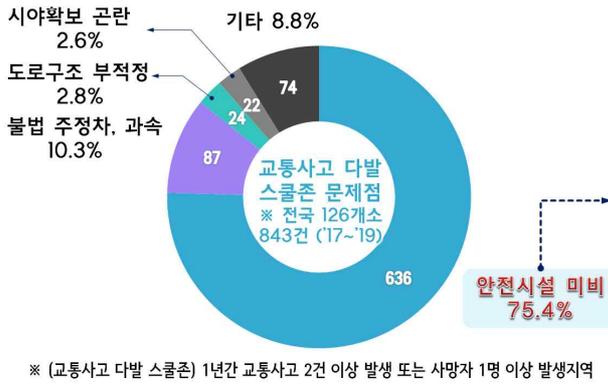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어린이 전체	사고 건수	21,670	19,818	18,000	16,542	15,642	14,930	14,980	14,095	13,323	12,497	11,728	12,110	12,191	11,264	10,960	10,009
	사망자	369	265	250	243	179	138	136	126	80	83	82	52	65	71	54	34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	6,712	6,841	7,065	8,346	8,429	8,999	9,584	13,207	14,921	15,136	15,444	15,799	16,085	16,355	16,555	16,765
	사고 건수	588	529	349	323	345	517	535	733	751	511	427	523	541	480	479	435
	100개소당	8.76	7.73	4.94	3.87	4.09	5.75	5.58	5.55	5.03	3.38	2.76	3.31	3.36	2.93	2.89	2.59
	사망자	18	8	7	9	9	5	7	9	10	6	6	4	8	8	8	3
	100개소당	0.27	0.12	0.10	0.11	0.11	0.06	0.07	0.07	0.07	0.04	0.04	0.03	0.05	0.05	0.05	0.02

□ 최근 10년간(2009~2018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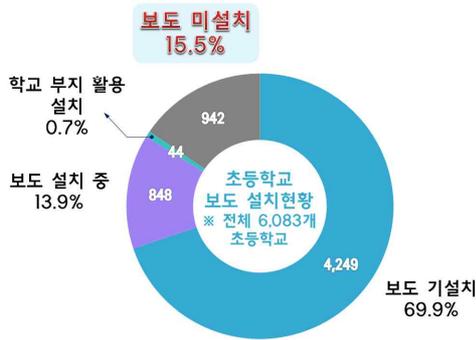


□ 어린이 통학로 관리실태

유지관리



보행공간 무인교통단속장비



□ 어린이 통학버스 정부부처 합동 점검결과(2019)

구분	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계(비율)	802	180(22.4%)	27(3.4%)	35(4.4%)	219(27.3%)	341(42.5%)
미신고 운행	146	5	0	5	50	86
안전교육 미이수	183	10	1	2	42	128
차량장치 미비*	473	165	26	28	127	127

* 하차확인장치 미설치·불량, 안전띠 고장, 후진경고장치 미설치 등